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 기자회견

◇ 일시 : 1998년 5월 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세실레스토랑

진행 순서

- 인사말
- 경과보고
- 기자회견문 낭독
- 사업계획 발표
- 질의응답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열린사회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운동연합, 국민승리21, 정치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無順)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경과

96년 12월초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 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활동

97년 5월 8일 '민주개혁사회단체연대회의' 결성 및 활동

98년 1월 20일 IMF체제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정책워크숍

2월 4일 2월 임시국회시 한시적 기구로 <재벌개혁과 고용안정 실현 공동대책위>구성

4월 10일 IMF시대 실업문제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개최

4월 23일 고용·실업대책,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개혁, IMF협약 관련 범국민대책위 구성 논의를 위한 1차 제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회의
- 고용·실업문제 해결 및 민중생존권 보장, 재벌개혁, 부당한 IMF협약과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대응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국민대책위 구성 및 활동에 합의함.

4월 27일 2차 제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회의
- 일시적인 대책위나 상충사업 위주의 한계를 넘어 IMF시대에 제기되는 주요 과제를 실현하는 보다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결의함.

4월 28일 제 시민사회단체대표 오찬간담회
- 5월초에 범국민대책위 결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정하고, 명칭, 조직체계, 사업계획 등의 준비를 집행책임자회의에서 위임함.

5월 4일 3차 제 시민사회단체 집행책임자회의
- 명칭은 많은 토론을 거쳐 제 시민단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도록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하고, 주요과제를 고용·실업대책, 민중생존권 보장, 철저한 재벌개혁, IMF재협상을 비롯한 경제주권 회복 등 4가지로 설정함. 또한 조직체계,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사무실 및 실무자 확보 등을 논의함.

5월 7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철저한 고용안정·실업대책을 마련하고 재벌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

오늘, IMF체제로 우리 사회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공원과 거리에는 늘어나는 실업자들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량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명씩 실직되고 약 2~30명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며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원동 철거에서 보듯이 도시 철거민들은 새 정부 아래서도 여전히 폭력적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농자재가격의 폭등으로 농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이처럼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정부'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없는 대책으로 이런 민중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정한 고통분담'은 구호로만 그치고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날로 후퇴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스스로의 개혁을 포기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심각한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금리, 재정긴축, 과도한 BIS기준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 강요 등 IMF 신탁통치가 우리국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앓아서 이자를 불리는 불로소득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피곤한 몸을 지하철역사에 누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정부에 철저한 고용·실업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대량 해고와 실업사태를 방치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모두 길거리로 쫓아내고 누구와 더불어 경제를 회생시키려 합니까? 정리해고를 중단시키고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눠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제 개혁과 무기구입 중단 등 국방비 감축으로 약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물가를 안정시키고, 종합적인 사회보장체제를 마련하여 국민생활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지금 재벌들은 여론의 항배탄을 주목하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능한 재벌 총수들의 퇴진,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주식 증여 등 재산세습의 원천봉쇄, 총수

와 일가족이 부당하게 축재한 재산의 반납, 명실상부한 소유 규제와 소유·경영의 분리, 노동자 경영참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위기의 우리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재벌개혁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재벌개혁에 대한 감시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정부·정치권에 IMF시대 철거민 등 도시빈민과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IMF협약에 의해 고금리상태가 지속되어 중소기업이 연쇄 도산하는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이것이 대량 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정통화긴축으로 대규모 공공 투자 및 사회복지관련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며, BIS기준의 과도한 적용으로 국내금융기관이 폐쇄 또는 통폐합되고 기업체도 따라 부도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당한 협약내용을 없애기 위한 IMF와의 재협상에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사회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주요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시작으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슴이 시커멓게 물들고 있는 실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노동절행사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강도 높은 탄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1998년 5월 7일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참의원사회사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인권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참교육사민모임 민주와 진보를 위한 국민총연맹 정치연대 불교교단위원회 전국불교총연합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교단위원회 카톨릭노동운동전국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간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회의의 간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간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기타 참의원협회 노동과 간강연구회 민중의료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청년의사회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노동총연합 전국민간운동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국정참여연합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청년회의소 서울노동청년연맹 전국민간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평화통일운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사회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한국노동운동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진보정치연합 노동정치연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문제정책연구소 노동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강강화연구소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인민운동사상방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회 4월 혁명 연구소 등 약 500개 시민·사회·종교단체(無順)